

북한 경제개발의 방향과 과제

김 영 윤*

- I. 문제제기
- II. 북한 경제개발: 방향과 전략
- III. 북한 경제개발의 정책적 과제
- IV. 정책사항 및 결론

요 약

북한은 자력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문제는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은 통일 후 서독이 동독에 가졌던 경제적 부담보다도 10배 이상이 된다. 지금 우리에게 북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점점 더 벌어져 가는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더 절박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기간 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하여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그 개발의 파급효과를 북한 내부로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개발을 시작으로 평양이나 남포, 신의주에 진출하여 공동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둘째, 경제특구를 비롯한 북한 지역에서의 생산분야 남북협력이 중요하다. 남한의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발전 전략을 적용하여 먼저 노동집약 및 원자재를 가공, 수출하여 북한의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겨냥한 경공업 분야의 생산협력체제를 갖춘 다음 기술집약부문의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로는 개발거점지역과 타 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이를 다시 남북간 더 나아가 동북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북한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남북협력기금 확충 등 다양한 자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양허성 자금을 받거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요구된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경제개발이 효율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북한은 대북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의 대북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 특혜를 부여하고, 국가브랜드를 창출하는 일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 문제제기

경제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상호 경제수준의 격차이다. 2004년 기준 국민소득면에서 북한은 남한의 32.7분의 1, 1인당 소득면에서는 15.5분의 1이다.¹⁾ 북한은 산업구조상 농업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개발국가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인 경제난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난이 남한에게 줄 수 있는 부담은 통일 후 서독이 동독에 가졌던 경제적 부담보다도 훨씬 크다. 인구와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한 단순 수치로도 남한이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은 지금 현재 통일 직후 서독의 동독에 대한 그것보다 10배 이상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담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그대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북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으며, 점점 더 벌어져 가는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더 절박한 문제다. 북한 경제를 현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삶의 질과 경제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북한간의 차이는 회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 남북한간의 실질적 통합은 물론,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은 중요한 과제다. 북한의 경제개발은 남북한의 경제격차 극복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하나 단기간 내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한은 남북 경제격차 해소 차원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의·동해선 연결사업을 비롯, 개성공단건설 및 금강산 지역 관광개발사업 등은 남북이 상호 협력,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경제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 경제협력사업이 그 추진 여건과 내용 면에서 남북한간의 경제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협력사업 추진의 여건 창출의 중요한 전제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으며,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그 내용과 형태 면에서도 사업 주체인 남한 기업의 수익성 확보와 동시에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과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1) 이에 대한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2004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한국은행: 2005. 6) 내용 참조.

차원의 지원이나 경협사업도 대북 ‘퍼주기 식 지원’이라는 비판으로 연결되어 있어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개발이 국민적 합의와 추동력을 도출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논의는 제외하고 북한의 경제 개발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경제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개발의 방향을 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과제로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지면이 한정된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북한 개발방안과 북한 개발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략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이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북한 경제개발의 방향과 전략(제2장)을 제시한 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과제(제3장)를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북한과 남한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 제4장은 결론이다.

II. 북한 경제개발: 방향과 전략

1. 북한 경제개발의 기본 방향

북한의 경제개발은 무엇보다도 그 시간적인 측면과 남한의 대북 관계개선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한의 통일방안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남한의 통일방안인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형성」과 연계하여, 「기반구축」→「북한개혁·개방」→「경제통합」 단계로 나누어 개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각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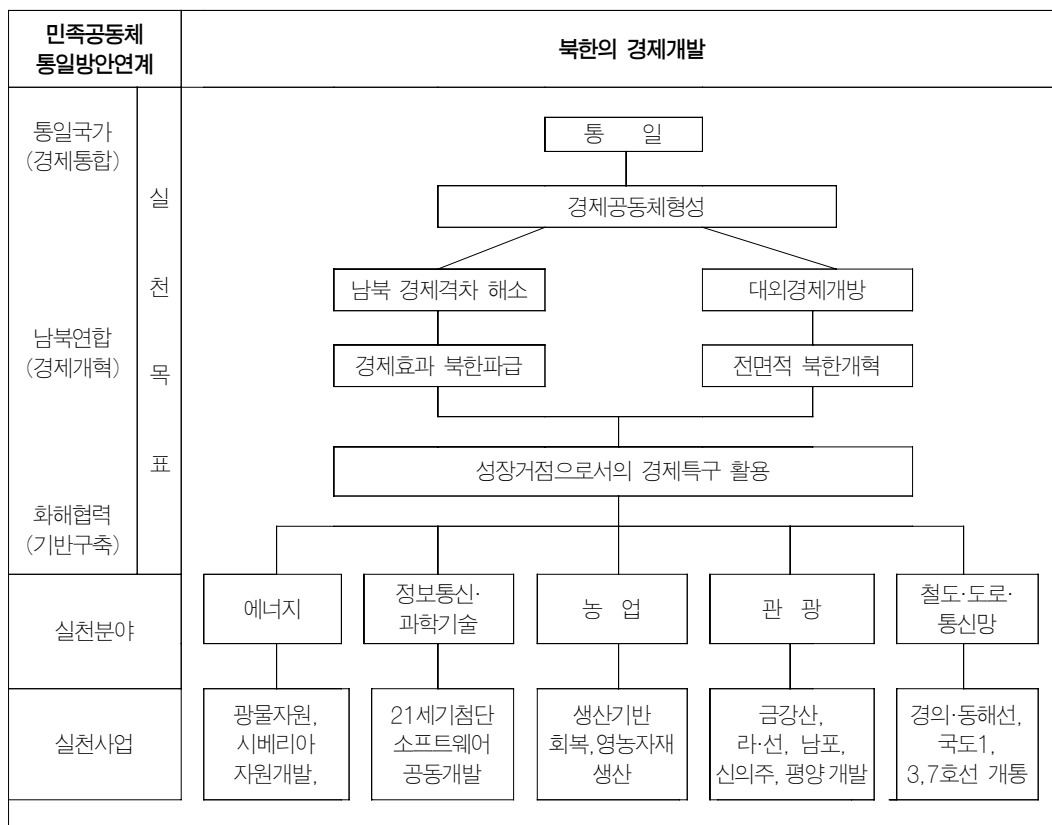
먼저,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본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따른 북한 체제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다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 직교역 확대, 남북한 물자 및 정보교류센터 건설 및 운영, 투자 및 과실송금 보장, 정기항로 개설, 경의·동해선 등 교통·통신망의 연결

등을 비롯하여, 북한 개성공단 및 남포공단의 경공업분야 진출 및 경제특구 투자, 남북한 공동어로사업, 비무장지대 개발, 환경보존사업 실시 및 금강산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남북연합 형성단계」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대내적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 단계에서는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남북한 공동시장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남북

한간 철강, 농산물, 섬유, 전자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시장경제화로 계획경제부문을 축소하는 한편, 제2의 가격 및 환율개혁, 중소기업의 개인사유기업화, 협동농장개혁 등의 추진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외경제정책에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북한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의 참여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사회제도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북한 경제개발의 방향 및 전략



끝으로 『통일국가 형성단계』에서는 바야흐로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단계에서는 북한의 사회적소유제도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체제 채택, 남북한의 화폐·경제·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화폐·금융제도의 단일화,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재산권 확립과 민영화, 남북한 산업구조조정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북한 경제개발의 전략과 과제에서 할 것이다.

먼저 북한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2. 북한 경제개발 추진전략

가. 생산 분야 남북한 협력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효율적 방안의 하나는 먼저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한 후, 궁극적으로 남한 경제와 연계하여 공동 발전하는 것이다.

남한 저성장 산업의 유희설비를 중심으로 북한 이전을 도모하고, 남한의 기술인력을 제공, 북한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의 경제발전 모형을 북한 지역에 접목시키면서 비용구조, 분업구조,

국제경쟁구조 등 변화요인을 고려, 국제경쟁력이 높은 산업의 특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적 및 부문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분야는 생산분야이다. 생산분야에서의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기술수준을 고려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동력 및 자연자원을 이용,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남한 시장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 더 나아가 미국 등 제3국 시장 수출용 생산 기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북한의 내수시장을 가급적 빠르게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한이 1960~70년대 추진했던 것처럼 북한 노동력을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목재, 출판, 인쇄 등 노동집약적 분야와 전기·전자제품 조립 등 경공업 분야의 임가공상품 생산에 집중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중국을 비롯, 미국시장으로 수출²⁾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망하다. 그 밖에 의료용품, 소금, 생수, 담배, 버섯 등 임산물도 포함하여, 농수산물 분야 제품들을 북한 지역에서 공동 생산하여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고 특히,

2) 이 경우 북한산 제품의 미국 등 서방 시장으로의 수출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관건이나, 이는 북미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 특용 작물을 「계약재배」하거나 「위탁재배」하는 동시에 비료, 농약, 농업용 비닐, 농기구 등 영농 자재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북한의 자연자원도 남북 협력의 유망분야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철, 금, 은, 동, 연, 아연, 니켈, 티타늄, 석탄, 중석, 석회석, 흑연, 고령토, 마그네사이트 등의 자원들을 가공하여 수출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연자원 개발을 위한 설비를 반출, 공동개발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남북협력이 유망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출산업의 협력을 통해 생산확대와 수출증가가 이루어지게 한 후, 생필품과 관련된 북한 경공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유효하다. 협력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비누, 제지, 신발, 의료용품 등을 비롯, 설탕, 제과, 제빵, 조미료(장류) 및 기타 농수산물 가공 등 식료품 부문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생필품 생산이 남한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 전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유효하다. 남한 기업은 북한이 수출시장으로부터 확보하는 외화 사정을 고려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수 시장의 발전

을 염두에 두고 음식료품을 비롯하여 TV 등 가전제품, 자전거, 시계, 카메라, 재봉틀, 화장품, 카세트, 주방기기와 같은 내구재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집약부문에서 공동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 단계에서는 투자를 동반한 남북협력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발전 선도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되, 남북간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다음과 같은 단계별·분야별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협력이다. 조선, 자동차, 철강, 금속, 기계, 화학 등 선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남북한 산업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발전 차원에서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술에 기초한 자본집약적 산업 생산기지가 북한 지역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부품 및 조립생산으로부터 철강, 금속, 기계, 화학 등 중공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되,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비료, 정유나 저기술 범용 제품, 정밀도가 낮은 산업용 기계, 농업용 기계와 같은 기계제작 분야의 협력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는 북한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선박 해체부터 시

작하여 선박용 엔진과 같은 고급 산업용 기계 생산 분야에서의 협력, 철강산업 분야에서는 남한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조강류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 남한내 제품생산 구조를 고부가가치화 하는 한편, 북한의 설비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협력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내 제철소 설비를 현대화해 남한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원료, 강관 제품, 핫코일 등의 생산이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 분야는 초기 북한의 기술 수준을 감안해 자동차 부품 가운데 위탁 생산이 가능한 저기술 분야의 협력, 즉 자동차용 배터리, 시트 제작이나 범퍼 도장 등 중기술 수준의 부품생산 협력과 중소형 승용차의 조립 생산이나 중저가 자동차의 생산기지를 만드는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협력에 이어 두 번째로는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통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분야는 북한이 향후 자체적인 연구개발이나 대외협력을 통해 개발을 가장 유력시 할 분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각 분야별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초기에는 임가공 협력을 통해 컴퓨터, 반도체 및 TV와 같은 노동 집약적 가전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이나 정

보·통신 분야의 단순 설계용역 분야, 장기적으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초기 남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북한의 유선 통신망과 무선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점차 첨단 통신장비 생산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지역별 경제협력: 북한의 경제특구 활용과 파급효과의 내부 확산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를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 경제특구의 개발효과를 특구 배후지 및 기타 지역으로 파급시켜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경제발전을 남한 경제와 연계하여 남북한 동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을 제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거점지역과 타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특구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거점을 개발한 후, 이를 동·서해 양대축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동해축은 동해선을 따라 금강산-통천·원산(함흥)-나진·선봉(청진)지역으

로 연결하고, 서해측은 경의선을 따라 개성-남포(평양)-신의주지역으로 연결하여 철도·도로 연결, 전력·통신 공급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을 고려해 개성공업단지는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남북협력사업의 전초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강산지역은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설악산 지역과의 연계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관광특구내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해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휴양·관광·레포츠를 포괄하는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육성하되 육로개방을 통한 설악산 지역과의 연계관광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 지역은 동북 3성을 비롯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창구 및 대외 개방의 거점으로 육성, 물류단지와 경공업 수출단지로 중점 개발하고 중국 「단둥」 지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선지역은 경공업 및 관광 중심으로 개발해 러시아 진출을 위한 국제무역기지로 육성하고, 평양·남포지역은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되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지역 경제의 중추권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경제거점지역을 남한과 연계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주요 공업지구들을 거점지역으로 개발

하여 집적효과를 추구하되, 불균형개발이 되지 않도록 산업별 입지요인과 생산요소적 특성, 환경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기존의 남한 산업단지와 해안축을 중심으로 연결, 내륙과 동서로 잇는 X자형 또는 격자형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로써 목포-군장-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남북한 서해안축은 환해경제권으로 지정하여 정보통신, 수송, 첨단기술 등 중추 기능을 확충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부로 개발하고, 부산-포항-동해-원산-함흥-청진을 연결하는 동해안 산업축은 환동해경제권으로 지정하여 기초 소재형 산업, 조선 및 자연 자원 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남한의 교통망 체계를 북한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한 연계를 위한 우선 복원 대상구간으로서 도로는 이미 건설 완료된 문산-판문점-개성을 있는 국도 1호선, 동해안의 간성과 장전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의 개통과 함께 철원-평강의 국도 3호선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통수요에 따라 국도 5, 31, 43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철도의 경우는 현재 완료된 개성-판문점-문산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철원-평강-북계를 연결하는 경원선을 우선 복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북한 내부의 운송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북한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는 동북아 및 유러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이다. 특히 수출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와 육로를 통한 직접 교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 연결되는 철도망의 구축은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산업을 동북아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북한의 경제거점 지역과 동북아 주변 지역을 겨냥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남북한간의 산업 구조조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북·중 국경지대가 대륙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³⁾ 특히, 중국 동북부 지역에는 하얼빈-대련 철도를 축으로 주요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특히 심양, 장춘, 하얼빈, 대련 등은 석유화학, 기계, 야금, 전자 등의 '첨단산업개발구'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극소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미래성장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 동북 3성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한반도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종합관광개발,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자원 공동 활용 및 러시아 극동의 목재, 어업, 석유, 가스 개발 중심의 협력사업도 유망할 것이다.⁴⁾ 사할린·캄차카의 대륙붕과 이르쿠츠크의 석유·천연가스 개발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협력사업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북·중 국경지대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바이칼-아무르철도(BAM), 몽골통과철도(TMGR), 만주통과철도(TMR) 등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존재하고 있어 북한 지역의 대외개방과 주변국들과의 상호교류·협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의주, 만포, 혜산, 회령을 비롯하여 두만강을 잇는 북·중 국경축을 중심으로 경공업 및 북방자원 가공산업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북한의 동서 연해지역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주는 양호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나진·선봉지역은 기존의 제철, 제강, 기계화학 등 중공업과 함께

3) 중국은 2000년대 선진국 수준의 첨단산업 개발을 목표로 동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1년 첨단산업개발구 27개를 지정했고 각급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첨단산업개발구나 과학원구를 이미 50개 넘게 지정한 바 있다.

4) 동북 3성의 경우 중국은 압록강 주변의 단둥시, 집안시, 두만강 주변의 훈춘을 비롯하여 도문, 장백 등 11개 국경 도시를 무역도시로 개방하고 훈춘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원료를 들여와 가공하여 대외 수출할 수 있는 경공업 및 첨단산업 육성의 적지로 평가된다. 따라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러시아 경제특구, 일본의 동북부 지역과 연결,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 동해의 함흥-홍남, 원산, 서해의 남포-송림, 해주 그리고 압록강 어귀의 신도도 중요 협력거점이 될 수 있으며, 금강산과 원산도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남북 공동어로, 연안 해저자원 개발 등 자원의 공동 활용 가능성이 높다.

다. 주요 산업분야별 경제사업 추진전략

(1) 농업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농업정책의 잘못으로 크게 파괴된 상태다.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의 회복을 위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산림 남벌 및 화전 개간 방지와 함께 하상을 낮추는 사업과 다락밭 제방공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비롯해 불도저, 트럭 등 국내 건설장비를 지원하거나 공동 생산하는 일이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 비료, 농기계, 농약, 제초제, 농자재(비닐 등 보온 영농자재) 등 영농기자재의 생산 및 공급 능력 확

대를 위한 협력이 요망된다. 여기에는 북한 내 영농자재를 신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거나 합작투자 방식을 통해 기존의 북한 영농자재 생산공장을 개·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료생산과 관련해서는 종류별, 지역별 소요량을 파악한 후, 필요분량을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을 개·보수하거나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북한에는 복합비료 생산공장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 농기계는 민간 차원의 합작투자형 공동생산이 바람직하다. 북한에 농기계 합작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한편, 자동생산라인을 갖춘 농기계 조립공장을 북한지역에 건설하고 부품은 남한에서 공급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답·작 겸용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를 우선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한편, 농약은 완제품 합성공장을 합작투자형태로 설립·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닐은 향후 북한에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기존의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원료를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다. 장기적인 원료공급 계약을 통해 합작 생산할 수 있도록 하되, 비닐 생산에 필요한 기술

5) 북한에서 제조되는 비료는 성분함량이 낮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요소 등 성분함량이 높은 비료나 복합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을 전수, 농업용 비닐제품의 품질향상과 제품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유전공학을 이용한 벼 품종 육성, 방제기술 및 제초제 사용기술 등 농업생산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비롯, 농기계 설계 전산시스템의 운용 기술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요청된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지역별 특화된 종합축산단지 개발을 위한 협력 추진, 축종별 사육지, 사료공급 상황, 생산된 축산물의 수요 등을 고려, 지역별로 적합한 축산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에너지 및 사회 인프라 분야

에너지 분야에서는 북한 에너지 공급선의 다변화를 포함, 에너지 자원 개발에 목표를 두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의 광물자원 중 석탄을 비롯, 경제성 있는 에너지 자연자원을 공동 개발, 북창 화력발전소, 동평양 화력발전소 등 북한의 대형발전소를 정상 가동시키는 일에서부터 남한기업이 진출하는 북한 경제특구에 공단용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첫째, 남한의 자본과 국제 석유시장 운영 능력, 북한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북한에 남북합작 국제정제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석유수요전망과 석유정제센터의 신규건설 구상 및 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공동 추진도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중국-북한-한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에 적극 임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셋째,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이 “자원의 보고”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⁶⁾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따라서 남북이 협력하여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통·통신 및 사회 인프라 분야에

6) 러시아 연방 수자원의 82.5%, 수력발전잠재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경우 동시베리아 약 32조 입방미터, 극동지역에 약 11조 입방미터가 매장되어 있다. 석탄의 경우에는 동시베리아 칸스크-아친스크지역에 1조2천억톤이 매장되어 있다. 광물자원의 매장량도 풍부, 동시베리아 지역의 『노릴스크』지역은 세계 니켈생산의 약 20%를, 극동지역은 러시아 연방 금생산의 약 60%를, 극동지역의 사하공화국은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약 26%를 점유,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 생산량중 텅스텐의 약 80%, 붕소 100%, 납과 아연 60%, 주석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과 삼림자원도 풍부하여 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약 70%, 삼림 면적은 세계삼림면적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서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 남북 당국자간 경제 효율성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부문의 협력을 확대하는 일이 긴요하다. 이의 대상 분야는 주로 제품생산설비, 원·부자재 및 제품 수송에 필요한 전력, 철도, 도로, 항만분야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SOC를 한꺼번에 확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한의 투자능력,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 지역, 규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 경제특구와 관련된 발전시설, 공단내 상주 인력을 위한 주택이나 부대시설 건설, 공단과 항만 및 대도시를 연결하는 남북한 간 물자 수송용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시설에 우선 투자한 후, 북한내 타 지역 공업지대와 공단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확충 및 보수, 물류 단지 조성, 주택 건설이나 정보통신망 구축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통신망의 남북한 연결과 관련해서는 우선 단절된 남북도로·철도망을 연결하는 한편, 남한의 간선도로망을 북한에 연장·확충하되 장기적으로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동북아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⁷⁾ 북한지역 통신 인프라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통신망 고도화 추진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통신망 구축의 확산을 시도하되, 먼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로부터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대상 지역 및 면적을 늘려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정보·과학기술 분야

남북간 IT 분야에서 가장 유력한 협력은 원·부자재와 설비 제공형 임가공 사업을 비롯,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공동개발 및 대북 위탁개발형태를 통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 될 것이다. 초기 협력단계에서는 북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와 방식의 사업 추진이 마땅할 것이다.

첫째,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동원해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부가가치가 큰 분야의 남북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부품, 교환기, 광케이블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7) 서울 ~ 신의주, 동해안 노선을 『아시아하이웨이』와 연결,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과 통합도로망을 구축하고 한반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및 나진선봉 지대를 중심으로 임가공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합영·합작 기업형태로 평양 및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중국 지역과 인접한 신의주 지역 또는 중국의 단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인터넷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해 송금, 반·출입 및 임가공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해 학술·문화·스포츠·관광 등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IMT-2000 등 신규 서비스의 도입·확산을 추진하고 이동전화 국제로밍 지역을 확대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외 IT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 IT표준화 협력을 추진해 동북아 통신망의 허브로 발전 시켜야 한다.

(4) 관광분야

남북한 관광사업은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인 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한 관광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관광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면서 동북아 관광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내부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금강산·개성·평양 관광의 확대와 함께 남북한 지역관광개발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 관광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한반도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지역 관광잠재력을 평가하여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즉, 북한 지역 관광잠재력 평가와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여 남북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다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관광자원 개발·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평양 및 개성관광 프로그램 개발하는 한편, 외국인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관광일정 및 관광상품을 다양화(당일, 1박, 2박, 3박, 4박 등)하는 일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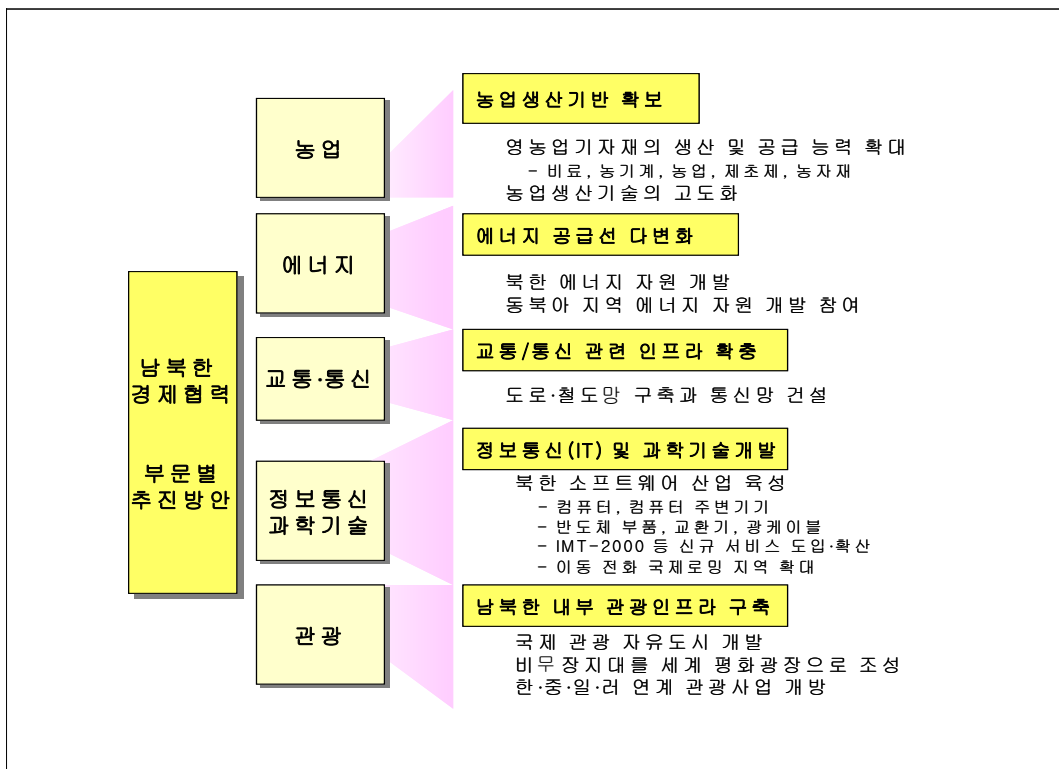
셋째, 동북아 관광투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 관광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상호이익 증대와 동북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 관광자원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발판으로 백두산과 금강산에 대한

관광루트를 우선 개발하고 묘향산, 칠보산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수준의 관광시설을 개발하여 동북아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일이 중요하다. 금강산 지역을 세계적 테마파크로 개발하고 숙박, 위락, 쇼핑,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해 동북아의 국제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남북 접경지역을 세계적 생

태관광지역의 상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광벨트화 하되, 생태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도 요구된다. DMZ 관광자원의 특성을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거나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및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중·일·러 연계 관광사업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일간 연계교통체계, 북한과의 경의선 및 중국, 러시아 등과의

〈그림 1〉

주요 분야별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안



북방교통망(육상, 해상) 구축, 동북아 육로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한편, 동북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황해권내 주요 항만 도시뿐 아니라 블라디보스톡, 니가타 등 환동해권의 도시들도 포함시켜 동북아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거나 한·중·일 3국이 제주도, 하이난 섬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자유지역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논의한 주요 분야별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Ⅲ. 북한 경제개발의 정책적 과제

1.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남북 경제협력의 효율성과 북한 경제개발의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경제 개혁 조치를 추진해야만 경제개발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은 가격 자유화로 나가는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미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면서 그 비중을 제고하고 부서를 통폐합하여 부서장들을 실질적인 기술관료들로 충원한 점과 부총리를 대폭 감원한 점이나 상급 기관으로서 부작

용이 많았던 『중앙위원회』를 폐지시키면서 예고된 조치였다. 당시 북한은 제품사이의 가격균형을 정확히 맞추고 제품생산을 높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가격체계를 마련하려고 했다. 왜냐 하면 북한에서의 상품가격은 계획가격이며 일단 제정된 가격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며 통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와 가격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 정확한 계획수행 실적의 평가, 합리적 경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식량난, 에너지난 등으로 북한내 물자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제도권내 국정가격에 의한 정상적인 유통은 위축되는 대신 암거래가 크게 늘어나 기존의 북한 가격체계 및 질서가 올바른 경제운용을 어렵게 할 정도로 문란해졌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가격 시행 50주년을 맞아 “상품의 수요와 공급관계, 제품의 질에 따라 값을 높일 것은 높이고 낮출 것은 낮추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자유화 조치와는 괴리를 보이는 것이기는 하나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가격체제를 정상화하고 극심한 가격질서 문란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나름대로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다음 단계인 가격자유화로 이행하기 위해 필히 요구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

다. 따라서 일부 공산품을 시작으로 가격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품목에 적용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산수단의 소유주체와 관련된 개선조치를 대폭 개편·전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구 헌법에서는 국가, 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했으나,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가, 개인 이외에 사회협동단체로 규정하고 사회단체에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상사들도 포함시킴으로써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했다(개정헌법 제20조). 예를 들어 종래에는 트랙터 등 「농기계」는 국가만, 「농기구」는 협동단체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개정헌법에서는 사회협동단체도 「농기계」 소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제22조). 이와 함께 국가 소유 대상과 관련하여 '교통·운수' 부문에서 '철도·항공 운수'로 한정시킴으로써 이외의 도로 및 해상운수 부문을 국가의 배타적 소유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제21조). 이는 도로 및 해상 운수분야에서의 건설 및 운영사업에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도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종래 소비재의 개인소유 주체를 「근로자」로 제한했으나 개정헌법에는 「국민」으로 규정, 소유주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제24조).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 또한 개인 소유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써 개인 소유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텃밭 경작을 통한 이윤뿐만 아니라 농민시장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적 이익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이 암시장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들도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시장거래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유에 대한 개선조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확대·발전과 함께 앞으로는 개인 서비스 분야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치로 연결시키고 타 분야의 생산수단도 사적소유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운영과 재산성을 자유화해야 할 것이다. 1998년 북한 개정 헌법은 기업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강화,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 생산성 제고 및 품질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개정 헌법은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을 규정함으로써(제33조), 기업관리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있으며, 공장·기업소의 지배인과 기사장이 이 규정을 어기면 헌법 위반 사범이 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제는 지배인과 기사장 등 경제 간부들이 기업 관리에서 독립채산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경제관리

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 문항을 추가하고 있는 것도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종래에 허용되지 않았던 공장, 기업소의 의사결정권이 포함된 독립채산제의 실시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경제관리에서 원가(cost), 가격(price), 수익성(profitability) 등을 고려한다는 문항을 추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생산 기여도에 따른 분배가 물질적 인센티브제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종래의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함께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로 추가 허용(제24조)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상업 등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물질적 자극의 수단으로 북한은 우선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한 분조도급제를 도입했다. 분조도급제는 ①분조 규모를 종전의 10~25명에서 7~8명으로 축소하고 작업반 단위로 운영하던 「우대제」를 분조에 직접 적용하며, ②생산계획을 하향조정하여 과거 실적을 감안한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었으며, ③초과분의 자유처분권을 인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동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분조원에게 할당되는 초과분에

대해 상거래 등 자유처분을 허용한 것이다. 물론, 현재 초과분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 동안 공식적인 식량거래를 금지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조치들은 북한의 대내적인 측면에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개별농가에 토지와 자재를 임대해 주는 ‘농가청부제’와 같은 질적으로 제고된 조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업분야를 벗어나 공업과 상업분야로까지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보다 과감한 국제경제체제에의 참여를 통한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대외 무역의 주체를 국가 독점에서 사회·협동단체로 확대하여 이들 단체들도 무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외 무역사업의 자유화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북한이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 대외 접촉을 넓히려는 정책적 의지로 간주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합영·합작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교역 대상국과 교역 품목의 확대를 위한 무역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외화 교환비율을 1달러당 150원 정도로 현실화했으며 향후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교환비율이 결정될 것도 언급한 바 있다. 헌법개정을 통해 특수경제지대에

서 각종 기업의 창설·운영을 장려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나진·선봉 특구와 신의주 행정특구 이외에도 개성공단을 비롯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이외에도 남포·원산 보세가공무역지대, 청진 등에도 경제특구를 확대·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핵문제와 같은 군사 안보적 당면 문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6자회담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을 얻기 위한 국제적 분위기가 마련되고 국제금융기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대북 진출여건의 개선

북한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과 정에서 남한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이 대부분 사회간접시설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사업이자 경쟁시장의 원리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한 정부의 지원과 민간기업의 공동진출을 포함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최대의 특혜를 부여해 자본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 내에서는 자유로운 외화지급, 체류기간 상한 및 재외공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다국적기업 유치전략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장점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국가 브랜드, 즉 국가위험의 부담이 없으며 기업하기 좋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예를 들어 무세,⁸⁾ 무규제, 무분규 등 3무 지대와 같은 국가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되 경험사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한편, 외국기업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8) 한국의 소득세에는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법인세를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음. 이는 근로소득자와 개인 자영업자간의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저축과 소비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는 절세를 위한 탈법조장, 투자의욕상실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는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대폭적인 경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법인세의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에 대해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 인근 어느 나라보다 많은 외자를 유치한 바 있다.

는 다국적 기업타운을 북한지역에 공동건설하고 경제적·물적 인프라 구축 이외의 정치 안정, 부패 해소, 사회질서 준수, 독창적 문화창달, 교육혁신과 같은 사회적·정신적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의 자유 활동을 위한 영어 공용화와 세계적인 주거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남북공동협력사업이 추진되는 특구 내에서는 모든 행정 및 경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 공용화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외국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주거 시설 투자에 대한 감세 조치와 토지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남북경협 사업에의 실질적 참여

북한의 경제개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의 중요 수단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강산지역과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 경제특구 관련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남한이 장비, 건설 등 모든 것을 ‘올인’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단지 노동력과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노동력만 제공하는 방식은 북한개발을 위한 기술축적과 사업운영에 대한 지식확보라는 측면에서 그리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북한의 경제특구는 조차지(租借地) 경제(enclave economy) 밖에 될 수 없다.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성공단 건설은 남한의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로 간주되는 측면이 강하다. 개성공단 건설이 남한이 주체가 되어 우리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소로서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의 궁극적 개발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기술축적,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차관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장비를 직접 도입하고, 그 장비를 운용하여 공단을 개발하고 공장건물을 자체적으로 지을 때 기술, 기업운영, 경제성 창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이 북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효과가 기타 북한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 공단 운영의 이익 창출을 위해 북한이 스스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한의 발전된 산업기

술을 북한에 그대로 이전·적용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에는 아직 남한의 기술 수준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북한 스스로도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개발은 기본적으로 북한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이는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4.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자원조달과 효율적 운용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원은 국민적 합의 기반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정부출연금, 민간자본유치,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자본 및 현물 참여 등의 형태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와 민간 및 국제금융기구 차원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가. 정부차원

정부차원에서는 먼저 남북협력기금의 확대와 함께 재정투융자 및 특별회계의 일부분을 남북협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재정투융자 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 기

간시설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바, 교통관련 특별회계의 일부를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용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⁹⁾

두 번째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협력기금으로부터 직접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을 개발도상국인 외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정치적 불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전환·처리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세 번째로 광업진흥공사가 국민경제 기여도와 해외의존도가 높은 5대 전략 광종, 즉 개발 수입의 효과가 큰 사업에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바, 이 자금을 통해 남한의 민간기업의 북한 지역 자원개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대북 경제협력재원이 단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각 사업별 조달재원상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국공채 발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의 공채 의존도를 세출예산 대비 1~2% 정도 증가시키는 범위에서 추진하되, 국공채 매출의 원활화를 위해 매입자를 위한 조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9)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계상되는 것으로 자금의 성질상 북한의 사회간접시설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목적세 신설, 즉 조세부담률의 순증가를 통한 대북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민간차원

민간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다. 첫째, 통일복권, 통일통장, 입장료 수입(국립공원 및 국가시설 방문)을 통한 기금 확충, 둘째, 민간차원의 남북협력기금 출연확대, 셋째, 민간기금 형식의 사회간접자본기금을 설립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방법,¹⁰⁾ 넷째, 국내외 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의 다국적 컨소시엄¹¹⁾을 구성하거나,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되 국내민간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사업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무상이나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일본 공적개발원조(ODA)에 남한이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는 일·중 수교 전

후 중국에 대거 지원되었으며, 필리핀 베트남 등에도 지원된 바 있다. 현금 지원도 가능하나 대부분 일본기업의 현지 진출과 함께 지원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외국기업들과 동반 진출하는 형태로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국제금융기구 활용

북한개발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외자 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방의 민간투자가 회임기간이 길고 투자위험성이 높은 인프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따라서 차선택으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도입을 통한 인프라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IMF, IBRD, IDA, ADB 등)로부터 차관, 원조 등 양허성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¹²⁾이 최우선적 과제인 동시에 여기에는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10) 사회간접자본기금의 설립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와 상업금융기관, 보증회사, 연금기금 및 국제기업들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 은행간 「동북아시아 금융협의체」를 설립하고 이의 재원을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11) 여기에는 Project Financing을 통해 민간기업이 정부와의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에 의거 프로젝트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 그 시설물을 정부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방식(BOT)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수요에 대처하면서도 민간자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효율적 경영기법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금조달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IBRD의 직접대출제도를 비롯하여, 개발도상국의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또는 지분출자를 제공하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직접대출 및 민간금융기관과 협조용자 등이 있다. 그 외에도 ADB나 민간상업은행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다.

12) IMF는 가입희망국의 자격에 관해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IMF 협정문에 의거한 의무사항 준수를 표

북한을 인권침해국가로 분류, 국제금융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¹³⁾ 한국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의 시한이 필요하며, 가입 후부터 북한이 자력에 의해 차관을 공여받기까지는 최소한 5~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 효율적 자원운용

조달되는 자원은 그 운용 및 관리 면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진 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과 비용 지출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민간, 국제기구간의 연계를 통한 입체적 관리, 조달된 자원의 안전성 및 수익성, 긴급 비용조달 및 운용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원의 효율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

별 전담기구(가칭: 남북경제협력재원운용위원회)의 설립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단계별 대북 투자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확충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거나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국공채발행,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융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재원 액수와 조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유형별, 사업 장소별 예산 소요액과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분담 비율, 중장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담 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해외 전문가들의 과감한 영입이 요구된다.

IV. 정책사항 및 결론

1. 국민적 합의도출

현재 남한에는 대북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적

명한 가입희망국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IBRD는 가입자격을 IMF가맹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IDA와 IFC도 가입조건을 IBRD 가맹국으로 제한하고 있다. ADB는 역내국일 경우 ESCAP의 가맹국과 UN 또는 UN 전문기구의 가입국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차관이나 원조를 받기 위해 1996년 이후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1996년초 IMF, IBRD 관계자와 접촉하여 양 기구의 대북한 차관자금지원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1997년 6월 김형우 駐UN 북한 대사가 IMF, IBRD 가입 문제 협의를 희망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IMF는 1997년 9월, IBRD는 1998년 2월에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한 바 있다.

- 13) 미국의 수출관리법(Export Control Act)은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할 경우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IMF 전체투표권의 17.78%를 점유, 협정문에 규정된 주요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국민의 다수가 교류 협력의 활성화라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방법 면에서는 비판적 견해를 내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북 퍼주기’ 식 비난은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지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대북 지원을 비롯한 대북 포용정책이 본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거나, 대북 지원이 북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해 호응하는 자세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에게 지나친 양보나 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북 협력사업의 국민적 합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부차원의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첫째, 실용주의로의 대북 정책 추진이다. 인도적 차원이 아닌 경제협력 추진상 요구되는 대북 지원은 반드시 평화정착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연계해 추진하고 대북 지원을 보다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 사업 성사를 위한 북한의 ‘웃돈’ 요구를 철저히 배격하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인도적 차원의 현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상의 지원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적인 감사를 받아내고 이를 남한의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 대북 지원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 정치민주화 문제, 사회경제의 개혁 문제도 당당하게 언급하고 차기 지원을 위한 협상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보이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여 부정적인 대북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북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국민여론조사, 공청회, 광범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적인 동의가 형성되는 환경하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추진이다. 대북 정책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지를 피함은 물론, 대북 정책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당면 현안의 해결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대북 퍼주기 논쟁과 같은 남남갈등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여섯째,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경제의 발전과 지역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등 우리 사회의 제반 갈등 구조의 해결이 필요하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개선을 통해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 “우리도 못사는 데 북한을 왜 도와주어야 하느냐”는 서민계층의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등을 통해 남한 내부의 경제적 힘과 사회적 역량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요약

북한 경제개발의 목표는 남북경제의 동질화와 평준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연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하여 개발하고 그 개발의 파급효과를 북한 내부로 확산시킨 후 남북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개발 과정에 실질적인 주체로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다음 남북한 경제협력은 전략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원자재를 가공·수출하여 북한의 내수시장을 형성한 후 이를 겨냥한 노동

집약적 경공업 분야의 생산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그 다음 기술집약 부문의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지역별로는 개발거점지역과 타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이를 다시 남북간,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편, 주요 산업분야별로는 농업·관광분야에서 에너지 및 사회 인프라 분야를 거쳐 정보과학 기술 분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북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투융자자금의 남북협력사업으로의 사용을 고려하고, 민간차원에서는 기금설립과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양허성 자금을 받거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하며, 남한은 이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한이 감당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는 대북 투자 및 진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 특혜를 부여하고, 국가브랜드를 창출하는 일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한 차원에서는 북한개발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제가 중요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실용주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

아가서는 북한의 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남한 내부의 경제력과 사회적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1)”, 『KDI북한경제리뷰』, 2002년 10월호.
- 강정모, “제8장 대외경제와 무역”, 북한경제포럼편, 『북한경제론』, 법문사, p.1996.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높이깊이, 2005.
- 권영경, “북한의 국영기업개혁 내용과 성공의 가능성 탐색: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 _____, “북한 배급제 재개 내막”, 시사저널, 2005. 11.15자
- 김영운·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5년 3월,
-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2001년 10월 3일 담화문.
- 김재서, “선군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경제관리”, 『경제연구』, 2004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2003. 6. 28.
- 데일리NK, “북 국가배급재개 말잔치로 끝나나?”, 2005. 11. 9일자 기사, <http://www.dailynk.com/korean/>
-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한국은행 조사분석보고서, 2005. 11.
- 박명혁,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경제연구』, 2003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박재성, “분조가 기본분배단위로 기능하는 것은 현 시기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 『경제연구』, 200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박춘화, “독립채산제기업소재정관리에서 국가적리익보장에 관한 리론”, 『경제연구』, 2005년 1월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배종렬, “제4장.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방향 및 과제 - 3. 대외부문의 개혁과제”, 조명철외,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2003.
- 북한 내부분건,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KDI 북한경제리뷰』, 2003년 1월호.
- _____,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하여』, 『월간조선』, 2003년 1월호 별책부록.
- _____, 토지사용료납부규정 및 시장관리운영규정, 내각결정 제27호, 『KDI북한경제리뷰』 2004년

- 12월호.
- 료 헌,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의 상호결합을 견지하자”, 김소중 편역,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4.
- 리광일, “상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기 위한 몇가지 방도”, 『경제연구』, 2002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류운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범주, 공간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5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실태와 함의”, 극동문제연구소 주관 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북한의 개혁가능성 - 중국의 개혁과 비교를 중심으로』, 2005.7.
- 오선희, “사회주의기업소자금의 성격”, 『경제연구』, 2005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윤덕룡, “북한의 시장경제도입과 거시경제관리”, 『수은 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년 가을호.
-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 『경제연구』, 2003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번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경제연구』, 2002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조동호, “변화하는 북한경제 평가와 전망”, 『수은 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년 여름호.
- 정광영, “독립채산제기업소 자체충당금과 그 적립리용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05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_____, “기업소기금과 그 적립리용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05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창간준비 제10호, 2005. 10.28.
- 지태화,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자극문제와 그 빛나는 해결”, 『경제연구』, 200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최경희,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공급의 경제적 내용”, 『경제연구』, 2003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홍익표·동용승·이정철,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계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 중국과의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Ruediger Frank, “Economic and Ideological Transition in North Korea: Universal principles and Specific Features” 『KNSI 현안진단 제6호』, www.knsi.org/knsi/kor/center/view.